

퀴바디스, 피시즈

- 평화운동 편 -

송영훈, 성상희, 이태호, 아정

이 기획은 ‘평화들’에 대한 다양한 속고와 관점을 보여주기 위해 질문과 대답 형식의 시리즈로 마련되었다. 이 기획은 ‘평화들’에 대한 연구와 토론을 보조하기 위해 한 질문에 여러 견해와 성찰을 담는다. 이번 호는 한국에서 수행되고 있는 평화운동에 대한 평가와 전망을 다루었다. 다섯 질문에 평화운동을 실천하는 3인이 답한다: 성상희(생명평화아시아), 이태호(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아정(독립연구활동가).

질문은 편집위원장 이동기(강원대 평화학과 교수)와 편집위원 송영훈(강원대 정외과 교수/통일강원연구원 원장)과 강혁민(통일강원연구원 선임연구원)이 마련했다. 2022년 10월 25일 강원대 통일강원연구원 주최와 송영훈 교수의 사회로 좌담회가 열렸다. 토론 후 참여자 3인은 원고 형식의 답지를 제출했다.

송영훈: 세계사의 차원에서 보면, 평화운동은 국제 평화규범이나 평화정치가 정착하기 전에 이미 탄생했다.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전반 평화운동은 지배자들의 전쟁 수행과 군사주의 이데올로기에 맞서 다양한 사회 집단과 정치운동에서 지원했다. 비록 국제 평화운동이 20세기 양차대전과 냉전과 열전들을 막지는 못했지만 20세기 중반 이후 현재까지 국제 평화규범이 확산되고 평화정치가 발전하는 데 발판과 동력이 되었다. 한국의 경우 1980년대 민주화운동 맥락에서 평화운동이 발원했고 지난 30여 년 동안 여러 평화운동 단체들이 등장했다. 한국의 평화운동은 분단체제 극복, 식민폭력과 국가폭력 해결과 과거사 정리, 젠더 억압과 차별 극복 및 생태 전환 등 다양한 흐름과 연결되어 있다. 평화운동이 단순히 반전이나 군사주의 극복을 넘어 ‘포괄적’ 또는 ‘적극적’ 평화 형성을 과제로 삼기 때문으로

보인다. 평화운동의 보편적 성격과 역할을 어떻게 규정하는가? 평화운동이 여타 사회운동과 어떤 차이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가? 한국이나 동아시아 평화운동이 여타 지역의 평화운동과 어떻게 같고 다르다고 보는가?

성상희: 동아시아 3국이 공유해온 중국 문자인 한자를 파자(破字)의 방법으로 해석해 보면, 평화(平和)는 ‘쌀을 골고루 나누어 먹는 것’에 닿아 있다. 고르다(平)는 것에는 요동침이 없이 부드럽고 편안하다는 뜻과 골고루 나누어 먹는다는 의미, 즉 평등의 뜻이 들어 있다. 즉, 평화라는 한자에는 폭력이 없는 편안한 상태라는 의미와 각자에게 정당한 몫이 돌아간다는 실질적 의미의 평등의 뜻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평화는 정의와 닿아 있으며, 정의가 없는 고요함은 평화가 아니라 억압과 갈등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요한 갈통이 이론화한 ‘구조적 폭력’과 ‘적극적 평화’ 개념을 한자문화권은 오래전부터 막연하게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평화운동은 내가 살아가는 공간이 ‘고요하고 따뜻함’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사람들의 집단적 노력이라 할 수 있다. 평화운동은 집단의 힘으로 사회를 유지, 변화 및 개조해 나가려는 공동의 노력을 의미하는 사회운동의 한 영역이며, 폭력과 억압, 전쟁으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이 평화운동의 목적이라 할 수 있다. 평화운동은 정의와 평등이 살아 있는 세상, 폭력이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그 방법 또한 폭력적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개념 형성에서 내재되어 있다. 스스로의 목적과 어긋나는 방법으로 그 목적을 관철시킬 수는 없기 때문이다.

전쟁반대 캠페인이나 군비감축 운동과 같은 전형적인 평화운동의 형태 외에 전쟁피해자 구호사업, 전쟁범죄 처벌을 위한 행동, 군사주의에 반대하는 병역거부 운동 같은 다양한 형태의 평화운동이 있다. 그 다양한 형태의 실천을 통해 평화운동은 대규모 폭력과 그에 의한 인명 살상을 막는 역할을 수행한다. 전쟁과 폭력을 통해 파괴되는 것에는 사람뿐 아니라 사람들의 삶의 터전,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동물과 식물들도 있다. 그래서 전쟁을 반대하고 막아내는 것은 생태보전운동과 동물보호운동의 과제이기도 하다. 폭력과 전쟁은 사람들로 하여금 생과사를 넘나드는 극단적 경험을 하게 하여 사회 정의는 쉽게 파괴되고, 억압과 착취는 평상 상태에 비해 현저히 높아지며, 인간의 존엄성이 파괴된다. 2차대전 시기 일본 군국주의가 광범하게 저지른

위안부 성폭력, 한국전쟁, 베트남 전쟁이나 르완다 내전 등에서 저질러진 민간인 학살, 집단강간은 인간존엄성 파괴의 극단적 모습이었다.

그래서 반전운동 내지 넓게는 평화운동은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지키며 인간존엄성 파괴를 막고 정의로운 세상을 지키는 역할을 한다. 사회 진보를 지향하는 개인이나 집단이 전쟁을 옹호하는 것은 자신의 신념을 뿌리에서부터 허무는 것이다. 간혹 서구 자유주의를 신봉하면서 인권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억압이 심한 나라의 인민을 구원하기 위하여 무력을 사용하자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인도적 개입”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나는 이러한 무력 사용론은 결국은 그 공동체의 인권을 침해하고 사회를 파괴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는 것을 우리는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이라크 전쟁에서 뚜렷이 볼 수 있다.

평화운동은 여타 사회운동과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이가 있다. 첫째, 평화운동은 전지구적 성격을 지닌다. 평화운동은 일반적으로 전 지구의 평화를 염두에 두면서 이루어진다. 특정 지역에서 특정한 문제를 놓고 평화운동의 과제가 설정되어도 그것은 세계평화를 궁극의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제주해군기지 반대운동이나 성주 사드배치 반대운동은 직접적으로는 그 지역주민들의 이해에 기반하여 그 지역에 군사기지를 설치하는 것을 저지하는 목표를 두었으나, 그 궁극의 목적은 한반도 평화, 그리고 그것을 넘어 세계평화를 지키는 것에 닿아 있다. 평화운동은 항상 전지구인들의 연대를 필요로 하고 그 본질에서 연대 행동을 확대하는 것을 지향한다.

노동운동을 비롯한 계급과 계층의 이해에 기반한 운동, 독재에 저항하여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한 운동도 국제연대 흐름이 있지만 대체로 일국 내에서 쟁점이 형성되고 과제가 설정된다. 반면, 전쟁이라는 비일상적, 극단적 사태에 대응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평화운동은 피해 지역 주민들의 상태와 처지가 세계인에게 연민과 연대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게 되어 세계적인 연대의 흐름을 촉발한다. 베트남 반전운동, 이라크 반전운동과 현재도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 반전운동이 그 좋은 사례다. 수만리 떨어진 팔레스타인 인민들의 고통과 연대하는 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팔레스타인평화연대’와 로힝야 난민들의 고통에 주목하는 ‘아디(ADI)’와 같은 단체가 성립하고 활동하는 근거이기도 하다.

둘째, 평화운동은 생명 존중에 그 뿌리가 있다. 평화운동은 생명존중에 기

초한다는 점에서 생태운동과 연결된다. 인간과 동식물, 모든 살아 있는 것들의 목숨을 소중히 여기는 것, 즉 생명의 가치에서 생태운동과 평화운동이 갈라져 나온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에 평화운동은 그 뿌리가 같은 생태주의 운동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20세기 후반 유럽에서 녹색당 정치와 녹색운동이 환경운동과 평화운동을 두 개의 핵심 축으로 삼아 활동을 전개했던 것도 바로 이러한 연유에 기인한다.

결국, 평화를 이야기하지 않는 생태운동은 뻔어나가기 어렵고, 생태를 돌보지 않는 평화운동은 제 뿌리를 부정하는 것이다. 우리의 평화운동은 생태주의 운동과 결합을 추구해야 하며, 생태운동과 평화운동의 조직들은 서로의 운동을 이해하고 끌어안아야 한다. 그 결합 과정에서 녹색정치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한국의 평화운동은 전통적으로 남북대결, 외국군 주둔과 미국의 세계전략 등과 마주하면서 개별적인 사안들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평화운동은 한반도의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성취하자는 통일운동과 결합해 있었고, 양자는 크게 구별되지 않았다. 미군 주둔과 미국의 영향력 발휘라는 현실에 맞서면서 평화와 통일을 위한 사회운동은 전통적으로 반미주의 전통이 강했다. 이 점에서 한국 평화운동의 큰 흐름은 생태주의 운동과 결합한 운동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국의 평화운동이 반미운동 또는 통일운동과 구분되어 자신을 정립하기 시작한 것은 2003년 이라크파병 반대운동이었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된 강정마을 해군기지 저지 운동으로 평화운동이 제 모습을 어느 정도 갖추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1960년대 베트남 파병은 세계평화 파괴에 크게 일조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대중적 반대나 견제가 없었다. 이라크 반전운동의 경우에도 미국의 공격을 저지하기 위한 전쟁 발발 이전 집회에는 거의 사람이 모이지 않고, 김선일 씨 사망이라는 자국민 피해의 충격을 겪고 자국 군대의 분쟁지역 파견에 반대하는 것으로 초점이 모였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미국 점령군의 평화파괴와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비판과 모든 외국군 철수까지 운동의 의제로 올라온 것은 뜻깊은 일이었다.

나는 동아시아 지역 평화운동에 대해서 아는 것이 별로 없다. 일본의 헌법 9조 지키기 운동은 지구상 유일한 핵폭탄 피폭 국가로서 세계 평화운동 진영의 관심과 지지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 헌법 9조 운동은 전쟁을 절대적

으로 부정하고 군대를 보유하지 않는다는 원칙선언을 지키자는 운동으로 상당한 의미를 지니는 평화운동이다. 폭력과 전쟁을 반대하고 내가 사는 지역에서 평화를 지키자고 하는 목적과 취지에서 동아시아 평화운동 또한 세계 어느 지역의 평화운동과 다르지 않다. 다만 유럽의 평화운동은 이라크 전쟁, 팔레스타인 점령과 민간인 피해 등 멀리 떨어진 곳의 분쟁 현장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그 준비 정도와 대중참가 측면에서 응집력이 높다. 한국 평화운동은 여전히 분단과 남북대치라는 우리 현실에 더 집중하고 있다. 팔레스타인 등 지구 곳곳의 지속되는 평화파괴에 맞서 세계인의 연대 정신으로 다가가는 정도는 아직 약한 것으로 보인다.

이태호: 먼저, 한국의 경우 1980년대 민주화운동 맥락에서 평화운동에 관한 관심이 발원하여 여러 평화운동 단체들이 등장했다는 해석에 대해서 동의하는 면과 동의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는 점부터 얘기를 시작할까 한다. 반전평화를 직접적으로 내세운 운동과 운동단체들은 1980년대를 기점으로 생겨났긴 했지만, 한반도에서 평화운동으로 해석될 수 있는 사회운동은 꽤 오랜 뿌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3.1운동은 그 방식에서 비폭력 평화운동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목표와 지향에서도 평화운동의 특징을 보여주었다. 3.1독립선언서는 민족과 개인의 ‘자유’ 뿐만 아니라 ‘전 인류가 함께 생존하고 같이 살아나갈 권리’를 주장했다. 조선의 독립은 “조선인으로 하여금 정당한 삶을 누리게 하는 동시에 일본으로 하여금 그릇된 길에서 벗어나 … 동양평화로 중요한 일부를 삼는 세계평화와 인류 행복에 필요한 계단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약 3장에서도 “오늘 우리의 거사는 정의, 인도, 생존, 존영을 위하는 민족적 요구이니 오직 자유적 정신을 발휘할 것이요, 결코 배타적 감정으로 그에 벗어난 행동을 하지 말라”고 당부한다. 3.1운동이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인도에서 일어난 불복종운동에도 영향을 주었다고 들었다. 이보다 앞서 안중근이 주창한 ‘동양평화론’도 일종의 동아시아판 EU를 꿈꾼 평화구상이었다. 그가 사용한 수단까지 평화운동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에는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의 목표는 3.1운동과 마찬가지로 “일본으로 하여금 그릇된 길에서 벗어나 동양을 불들어 지탱하는 무거운 책임을 온전히 이루게 하는 것”이었고 협소한 민족감정을 넘어서는 것이었다고 생각한다.

분단과 전쟁으로 이어지는 국면에서도 평화운동으로 부를만한 실천들이 있었다. 작고하신 김낙중 선생은 한국전쟁으로 피난살이를 하는 동안 부산에서 ‘탐루’(探淚, 눈물을 찾다)라는 팻말을 들고 1인시위를 벌였고, 이후 자신의 평화통일방안을 들고 북한으로 건너갔다가 북한과 남한 양측 공안당국으로부터 고초를 당하기도 했다. 당시 남과 북의 이념 갈등과 교전의 한 편에서는 것을 거부하여 제3국행을 선택한 이들도 있었다. 한국전쟁 기간 동안 같은 고민을 했었던 시인 신동엽은 후일 ‘깎데기는 가라’는 절창을 남겼다. 나는 아직 “향그러운 흙가슴만 남고 그, 모오든 쇠붙이는 가라”는 쇠구보다 더 강렬한 평화의 호소를 찾지 못했다. 같은 맥락에서 휴전 직후인 1960년대에 일어난 평화통일운동도 통일운동만이 아니라 한반도 상황에서 일어난 평화운동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서구에서 시작된 ‘정치운동으로서의 평화운동’에 한반도 주민들이 대중적으로 동참한 사례도 있다. 한국전쟁 당시 한반도에서 약 천만 명이 핵무기에 반대하는 국제서명(스톡홀름 호소 Stockholm Appeal)에 서명했다는 기록이 있다. 구갑우 교수님이 알려주어 최근 알게 되었다. 당시 반핵운동은 사회주의 운동이 주도했는데, 한국전쟁 당시 한반도에서 핵무기가 사용할 것을 우려한 북한 당국이 국가 차원에서 서명운동에 동참한 결과다. 스톡홀름 호소가 기념비적인 평화운동인 것은 틀림없지만, 한반도에서의 그것은 전쟁을 수행하는 국가 주도로 진행된 운동이라는 점에서 온전한 평화운동이라 볼 수는 없다.

1980년대에는 민주화운동이 새롭게(혹은 다시금?) 주목하게 된 ‘민족자주’라는 맥락에서 ‘반전반핵’운동이 일어나고, ‘위안부’(성노예) 문제, ‘기지촌’ 문제, 민간인학살 과거사 문제 등이 이슈로 떠올랐다. 그 이슈들이 일단 떠오른 후에는 ‘민족자주’라는 한정된 테두리에 머무르지 않고 평화군축 운동, 인권운동, 성평등 운동으로서의 가치, 담론 및 실천 양식을 획득해가기 시작했다. 90년대 들어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운동, 군비축소운동, 베트남 전쟁 참전에 대한 시민사회의 반성과 사과 운동 같은 전형적인 평화운동이 본격화되었다. 매항리 사격장 반대운동이나 미군 범죄 처벌 SOFA 개정 운동처럼 전통적으로 ‘자주통일 운동’으로 구분되던 운동에도 권력의 민주화, 인권, 성평등 같은 다른 맥락과 동기를 통해 새로운 대중적 동력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위안부 문제나 기지촌 문제는 여성평화운동의 성장을 가져왔고 핵문제,

미군기지 오염 문제 등은 한국에서 환경운동을 성장시키는 계기로도 작용했다. 2000년대에는 아프간-이라크 파병 반대운동을 계기로 국제적인 반전평화-무장갈등예방 운동과의 연대가 크게 확장되었고, 베트남 전쟁 참전에 대한 시민사회의 반성과 사과 운동, 팔레스타인 연대 같이 한반도가 직면한 급박한 상황을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는 국제연대 평화운동도 가시화되었다. 이 시기에 일어난 미국무기수입(F-15) 반대운동, 미군장갑차에 의한 여중생사망 사건에 항의하는 촛불집회, 평택미군기지 이전 반대운동 등은 과거 소수의 활동가가 특정한 맥락에서 제기하고 주도하던 이슈가 대중적인 이슈로 확장되었고, 민족의 자주권이라는 추상적인 문제로서가 아니라 ‘안보’ 문제에 대한 국민주권 행사, 혹은 ‘안보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문제로 제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10년 이후에는 평화, 인권, 젠더평등, 생태의 가치들이 더욱 긴밀히 융합된다. 강정마을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운동, 탈핵운동과 밀양송전탑반대운동, Women Cross DMZ와 한반도종전평화캠페인 등은 이런 발전 경향의 한 정점을 보여준다.

평화운동의 보편적 성격과 역할, 여타 사회운동과 차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생각하고 있다. 평화운동은 권리와 권력의 문제를 다룬다는 점에서 다른 사회운동과 같다. 굳이 평화운동의 특징을 구분하라면, 권력의 한 양상인 폭력에 어떻게 맞설 것인가를 다룬다는 것인데, 따지고 보면 이것 역시 모든 권력감시운동 내지 권리 실현 운동의 보편적 특징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평화운동의 한 영역인 비폭력운동에서는, 비폭력운동이 비록 사용하는 무기가 다르지만 궁극적으로 상대로부터 권력을 빼앗고 이기기 위한 싸움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그릇된 권력의 동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싸움이라는 것이다. 불복종의 효과를 설명하는 데 사용되는 ‘구성적 권력’(constituent power)이란 개념은 사회운동은 물론 자연과학에도 두루 적용될 수 있는 개념이다. 또한 바람직한 평화운동은 다른 사회운동들과 마찬가지로 인권을 기반으로 접근한다. ‘인권 기반 접근’은 권리 담지자를 호명하고 책무 담지자(국가, 자치단체 기업, 국제기구 등)들을 지목하여 권리 담지자들의 개별적-집단적 권리를 보장하는데 관심을 둔다.

한편,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평화운동의 특징을 다른 지역의 평화운동과 구분하는 것은 가능할 듯하다. 한국의 경우에는 평화운동이 다루는 다양한

종류의 권력과 폭력이 분단구조 혹은 분단체제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세상의 모든 국가체제는 ‘국가안보’ 논리나 ‘예외의 일상화’ 같은 통치 기제를 작동시킨다는 점에서 이 역시 보편적 현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한반도에서의 평화운동은, 불안정한 정전상태가 70년간 지속되는 한반도의 냉전적 대결 상황, 반드시 한 나라로 통일해야만 하는 이유도 찾기 어렵지만 그렇다고 공식적인 두 나라 관계로의 평화공존의 전망이 합의되었다고는 결코 볼 수 없는 분단상황, 그래서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남과 북은 물론 지역적-지구적 차원의 군사적 정치적 갈등의 기압권이 형성되어 남북 주민 모두가 깊이 연루되고 고통당하는 상황, 남한 내부만 떼어 살펴보더라도 ‘세월호 빨갱이’, ‘중북 이슬람 동성애자’라는 혐오 발언이 당당한 시민권을 누리고 그 현장에 성조기, 일장기, 다윗의 별(이스라엘기)이 나란히 나부끼는 상황 등 기괴한 폭력 질서들에 대항하는 운동이라는 특징이 있다고 생각한다.

아정: 평화운동과 관련해서 나는 안보, 분단, 통일로 이어지는 연쇄적인 사유가 더 이상 보편적인 것으로 여겨지지 않기를 바란다. 국가 단위에서 추구되어 온 안보정책이 실제로 나의 안전에 기여하는지 되묻는 힘을 우리 사회가 가질 수 있었으면 한다. 그 힘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안보에 대한 르상티망(리액션)으로서가 아니라, 동시대적 고민을 반영한 안보 혹은 안전 개념을 재정의하는 상티망(액션)으로서의 사유와 실천이 필요해 보인다. 나는 외국 인보호소 폐지 운동을 하면서 보호나 안전이라는 개념이 지배의 언어라는 것을 실감했다. 누가 무엇을 누구로부터 보호하려 하는가? 동물보호, 자연보호, 부녀자 보호, 청소년보호, 아동보호 등에서 그 ‘보호’는 다름 아닌 통치술로 구사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한국이나 동아시아 평화운동과 여타 지역의 평화운동의 ‘차이’를 강조하기 보다는 한국이나 동아시아 평화운동과 여타 지역의 평화운동들이 어떻게 만나고 어긋나는지에 대한 논의가 절실하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난민신청자 조력 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이 있다. 난민 문제가 단일 사안이 아니라, 국경통제, 보더 임페리얼리즘(border imperialism 국경에서 작동하는 제국주의), 에스콧 사업이라 불리는 국경관리의 민영화, 단속-구금-추방으로 이어지는 치안의 문제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한국 사회에 만연한 난민혐오는 여러 층위의 혐오와 맞물리면서 각종 혐오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특히, 난민인정 소송의 과정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한국의 법정에서도 성소수자, HIV감염인, 젠더기반 폭력의 피해자들이 노골적으로 차별의 언어에 노출되는 장면을 마주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혐오가 양산되고 재생산된다는 문제가 있다. 동아시아에서 난민 관련 소송과 판결이 가장 많은 나라가 바로 한국이다. 한국의 판례가 동아시아 각국에 인용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걸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동아시아 국가들의 평화운동의 차이보다는 이 운동들이 어떻게 서로를 촉발하며 함께 할 수 있을지, 그 교차적 지점들을 잘 짚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송영훈: 21세기를 22년째 살고 있지만 지구적 차원이든 한반도와 동아시아 차원이든 전쟁과 적대의 현실은 크게 나아지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이라크 전쟁에서 발칸전쟁, 9.11 테러와 반테러 전쟁, 그리고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세계의 무질서도 심각하고 한반도 분단 적대와 중국과 미국의 지역 패권 경쟁 등 동아시아의 갈등도 만만치 않다. 그런 와중에 내년은 한국전쟁 휴전 70주년을 맞는다.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다. 위로부터의 평화로운 국제질서 형성이나 동아시아 화해 공존 체제 정치가 무참히 좌절되었기에 아래로부터의 평화 형성 노력이 더욱 화급해졌다. 평화운동은 두 방향의 과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평화운동이 소수 단체의 연대 노력을 넘어 대중적 사회운동으로 발전하고 시민들의 일상문화나 생활세계에 뿌리내리는 일이다. 평화운동이 전통적인 방식의 시위나 서명을 넘는 활동이나 삶의 문화로 발전해야 한다. 둘째, 평화운동은 대중들의 결집을 넘어 실제로 국제 평화 질서나 평화정치의 제도적 결과를 만드는데 이바지해야 한다. 그러려면 평화운동은 정치적 영향력을 높이면서 역진 불가능한 현실적 기반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 이 두 과제를 달성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평화운동의 발전 전망이나 방법에 대해 의견을 말해달라. ‘아래로부터의 평화’ 형성을 위해 어떤 새로운 실천 지평이나 전망을 뒤야 할까?

이태호: 앞서 평화운동과 여타 인권운동이 보편적 특징을 공유한다고 말했는데, 그 점을 보충하면서 논의를 잇겠다. 예를 들어 모든 사회운동과 마찬가지로 평화운동은 권리의 주체들을 자력화(empowered)하는데 관심을 가진다.

또한 여타 인권운동과 마찬가지로 평화운동은 아직 확립되지 않았고, 실현되어 보지 못한 상태를 권리로서 보장하는 것을 꾀한다. 그러다 보면 모든 인권운동과 마찬가지로 급진화되는 경향도 생겨난다. 하지만 평화운동은 갈등을 완화하고, 분쟁을 예방하거나 이미 벌어진 분쟁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폭력적인 권력과도 협상하고, 중재하고, 타협하는 현실적인 운동이기도 하다. 갈등 완화를 위한 중재와 협상, 시민 대화의 촉진과 퍼실리테이션도 평화운동의 중요한 영역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내가 속한 참여연대 등이 참여하고 있는 <평화·통일에 관한 사회적 대화>라는 프로그램이 있다. 남북 관계와 한반도의 미래에 관한 시민 속의 프로그램이다. 보수적인 시민사회단체들과 진보적인 시민사회단체들, 중도적인 단체들과 7대 종단이 함께 ‘평화·통일 비전 사회적 대화 전국시민회의’라는 추진 기구를 만들어 2018년 이후 지난 5년간 꾸준히 진행해 오고 있다. 통일부나 지방자치단체들이 ‘민간차원의 대화를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진행해 오고 있다. 이곳 강원대 통일강원연구원과도 몇몇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한 경험이 있다.

앞서 한반도에서의 평화운동의 특수성에 대해서도 간단히 언급했다. 그 복잡성을 고려할 때, 평화운동은 쟁점을 지나치게 단순화해온 ‘통일운동’이나 ‘민족자주운동’의 한계에 대해 비판하고 그것과 스스로를 구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 운동들은 공동체 구성원의 지향과 구성이 다양할 수 있다는 점을 종종 놓친다. 그 운동들은 국민, 민족, 국가 이외의 행위자들을 배제하거나 주변화하는 경향도 있다. 또 그 운동들은 평화 협력의 주체로서 주민과 지역사회(local)의 역할을 발견하거나 국가를 넘어서는 지역(region)적 세계적 차원의 전망을 찾아 나가는 데도 한계를 드러낸다. 예를 들어 무장갈등예방글로벌파트너십(GPPAC)이라는 국제네트워크는 국가 기반이 아니라 도시 기반의 네트워크다. 지역(regional) 내의 주요 도시에 시민사회 포컬 포인트를 두고 연대하고 협력하는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 이 잡지의 목표이자 제목인 ‘평화들 Peaces’가 지향하는 더 많은 평화와도 연결되는 접근법이라고 생각한다. ‘자주통일운동’에서는 그런 상상력이 좀처럼 발휘되지 않는다.

물론 한반도에서 그 전통적 운동이 일어나고 유지되어온 맥락을 무시하거나 그 운동들과의 연대를 한사코 배제할 수만은 없고 배제해서도 안된다고 생각한다. 역설적으로 여전히 풀뿌리 운동, 디아스포라 운동, 이주민 연대운

동 등과 연관된 현장에서는 소위 ‘자주통일’ 운동의 활동가들이 상당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남과 북의 자치단체를 연결하려는 노력에서도 여전히 ‘자주통일운동’은 확고한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평화운동의 발전 전망이나 방법과 관련해서 꼭 언급하고 싶은 것이 있다. 평화를 외쳐야만 평화운동은 아니라는 점이다. 모든 사회운동과 마찬가지로 평화운동은 우선순위를 바꾸는 운동이다. 다른 우선순위를 주장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군사안보에서 인간안보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군비축소를 외칠 수도 있고, 더 중요한 인간안보의 필요성을 실감하게 하는 다른 것을 이슈로 만들 수도 있다. 예를 들어 2013년 겨울 대학가에서 시작된 ‘안녕 들하십니까’ 대자보 운동, 2014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두드러진 ‘안전한 사회’라는 목표 등은 대체로 거꾸로 선 국가, 나를 보호하는 국가의 부재를 비판했다. 실제로 세월호참사에 대응하는 실천 활동에는 평화운동 주체들이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그 운동을 통해 우리 사회의 우선순위를 군사안보에서 시민 안전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국제적으로도 SDGs(지속가능개발목표) 이행, 기후위기 대응, 팬데믹 극복 등과 관련한 운동들이 새로운 우선순위를 내세움으로써 군사주의와 국가주의에 대항하고 있다.

이정: 무엇보다 평화운동을 담아내는 ‘새로운 언어’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병역거부를 하고 감옥에 간 H가 했던 말이 오래오래 마음에 남아 있다. 그는 “나를 아낌없이 사랑해주었던 할머니에게 병역거부를 설명할 언어가 내겐 없다”라고 말했다. 자기 실천을 담아낼 말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그것이 주는 폐색감이 있다. 다른 병역거부자 S는 글로 제 생각을 잘 표현하는 친구였는데, 신문에까지 이미 보도된 소견서 발표를 감옥에 가는 날 당일 아침에 엮었다. 원래 정의감이나 사회적 차원의 ‘비장함’으로 가득했던 그의 소견서는 ‘두려움’이 가득한 겁쟁이의 언어로 다시 쓰였다. 그래서 병역 ‘기피’와 병역 ‘거부’를 구분하는 치안성을 담은 운동에 대한 위화감을 솔직하게 표현해 주었던 기억이 난다. 과테말라 내전에서 성폭력을 당한 여성과 남성들에게도 자신을 경험을 담은 언어가 없었다고 한다. 그때 처음으로 ‘강간’이라는 말이 생겨났다고 한다.

이것은 실천적 담론을 생산해 내기 위해서는 매력적인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로 이어진다. 평화 ‘연구’는 현장을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이 중

요할 것 같고, 평화 ‘운동’은 현장에서 길어 올린 말들을 공을 들여 문제화/공론화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연구와 운동이 매번 현장에서 만날 수는 없더라도, 공론장은 서로의 사유가 섞이고 스며들어 연구와 활동의 이음매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리라는 생각이 든다.

동시대적인 문제들에 대한 공감력을 발휘해서 여러 매체를 통해 기존의 학술대회나 심포지엄 같은 형식을 넘어서는 ‘말의 자리’를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지금 수행하고 있는 활동들, 예컨대 페미니즘과 쿠퍼 정치로 평화를 말하고 실천하는 것, 일본군 ‘위안부’ 문제, 외국인보호소 폐지 운동, 동물해방운동의 교차 지점들에 주목하면서 그 활동에서 생겨난 문제의식을 공동의 언어와 사유로 새롭게 직조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

성상희: 21세기 들어서 한국에서 평화운동이라 부를 수 있는 사회운동이 본격적으로 출현했고, 그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평화운동 흐름이 형성되었다고 보인다. 유럽의 경우를 보면 영국은 전쟁저지연합(Stop the War Coalition)이라는 상설 반전운동 단체가 2000년대 초반 결성되어 꾸준히 활동하고 있고, 독일이나 프랑스는 아탁(Attac)이라고 하는 사회운동단체가 평화운동을 자신의 주요한 활동의 하나로 설정하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아직 대중적 기반을 갖춘 상설 반전운동 조직을 갖지 못하다. 그 속에서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피스모모’ 등이 대중성을 갖춘 평화운동 조직이라 할 수 있다.

2003년까지는 민족주의에 토대를 둔 반미운동 내지 통일운동이 평화운동의 주요 동력을 이루어 왔다고 보인다. 나는 2003년 이라크 전쟁 발발 이후 파병 반대운동을 하면서 평화운동이 민족주의 운동과 구별되는 자기 정체성을 형성하기 시작하였다고 본다. 2007년 해군기지 건설이 추진되면서 시작된 강정마을 제주 해군기지 건설 저지 운동은 군사기지 건설 문제를 놓고 본격적으로 대중적 저항운동을 한 사례다. 물론 그전에 있었던 평택미군기지 반대운동도 군사기지 건설에 대한 저항으로 의미를 지니지만, 제주 해군기지 반대운동은 한국군 기지 건설을 놓고 상당히 넓은 범위에서 반대운동이 진행된 점에서 평화군축 운동의 길에 세워진 이정표라 할 만하다. 이라크파병 전후로 해서 만들어진 평화운동 단체들, 즉 ‘팔레스타인 평화연대’, ‘참여연

대 평화군축센터’, ‘전쟁 없는 세상’ 등의 활동은 대중적 파급력이 세지는 않았지만 평화운동의 주요 주제에 대하여 꾸준히 말해왔다는 점에서 한국 평화운동의 정착에 크게 기여했다. 2010년대 중반에는 로힝야 난민 문제를 놓고 국내 대책위가 만들어지고, 군부 쿠데타가 민간정부를 무너뜨린 미얀마 사태에 대응하여 시민사회가 광범위하게 결집하여 대응한 것도 평화운동의 중요한 경험이다.

한국에서 평화운동은 아직 대중적 실천을 통해 자신의 철학과 방법론을 세워나가는 과정에 있다고 보인다. 평화의 개념, 평화운동의 목적, 방법에 대한 대중적 이해가 이루어지도록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생명사상에 기반을 두고 생태주의를 포용하는 평화운동 형성이 필요하다. 사람의 필요에 의한 생산과 유통, ‘살림’이 아니라 자본의 확대재생산 논리에 의해 ‘경제’가 돌아가는 상태에서는 우리의 삶에 항상 대립과 갈등, 폭력이 내포되어 있다. 제국주의 강대국들의 힘의 논리가 평소에는 경제와 정치의 영역에서 외관상 평온하게 관철되다가 강대국의 이해에 정면으로 반하거나 중요한 걸림돌이 되는 국가 혹은 세력이 나타나면 전쟁으로 치닫는다. 그것이 요즘 지구상 전쟁의 발발 배경이다. 특히 동서냉전 체제 붕괴 이후 미국 중심의 일극 체제에서 그 경향은 뚜렷하다. 아프간 전쟁, 이라크 전쟁, 리비아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등 모든 전쟁이 그렇다.

한국 평화운동이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평화운동의 사상과 이론, 과제가 시민들에게 잘 전달되어야 한다. 유엔헌장은 두 차례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인류가 성취한 주요한 평화와 인권의 이정표다. 유엔헌장이 두 가지 예외를 제외한 모든 전쟁을 위법으로 선언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특히 동서 냉전 붕괴 이후 미국 일극체제 하에서 벌어지는 평화파괴 현상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민족주의에 기반한 반미운동을 넘어서 미국 제국주의와 군사주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운동의 과녁을 정확히 맞히는 것이 필요하다.

가정폭력과 성폭력에 대한 감시와 통제 등 사적 폭력에 대한 문제의식은 사회구성원들에게 평화의 감성을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산업재해와 교통사고 등 일상에서 피해를 보는 것에 대한 사회적 각성도 평화운동의 기반을 다지는 데 중요하다. 적극적 평화의 개념을 어린 시절부터 이해하도록 교육과정에 평화교육이 녹아들게 하고 답사 체험교육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독일의 경우 초등학교 학생들이 나치 시절 수용소의 추모 기념관을 방

문해 조상들의 악행을 보면서 평화의 의미를 체험하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다.

평화운동의 지평을 넓히고 실천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평화운동의 사상 정립도 중요하다. 특히 분단체제의 특수성이라는 부정적 환경을 오랫동안 겪어온 한국인들에게는 쉽지 않지만, 국수주의, 민족주의, 애국주의 등을 극복하고 사해동포주의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민국가의 정체성보다는 내가 사는 마을, 고향을 뿌리로 하고 아시아 시민의 연대를 추구하며 궁극적으로 세계인은 하나라는 사고를 보편화하도록 하는 것이 평화운동의 토양을 기름지게 하는 길이다. 국민국가의 힘을 많이 빼서 일부는 작은 단위의 지역(흔히 영어로 Community라고 하는)으로 권력을 배분하고, 일부는 대륙 단위의 공동체 혹은 국제연합과 같은 지구 차원의 조직으로 권력 일부를 이양하는 흐름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덧붙여 강고한 반공주의 극복은 한국 평화운동의 토양 마련을 위해 필수적이다. 수십 년간 특정한 종교 신도들의 희생으로 확보된 양심적 병역거부가 드디어 헌법재판소 판결로 합법화되는 과정을 겪었다. 그 이전부터 여호와의 증인 신도만이 아니라 다양한 사상과 종교적 근거에서 병역거부자가 출현했다. 평화운동은 양심적 병역거부 운동 활성화를 지원하고 함께 어깨를 걸어야 할 것이다.

평화운동 발전의 토양을 기름지게 하려는 방법으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에 이주민 운동이 활성화되고 다문화주의가 확산하고 수용되는 것이다. 이주민 운동과 선주민의 연대가 스스럼없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통해 국경 없는 세계시민의 어깨 걸기가 활발해지는 것이 중요하다.

송영훈: 평화학은 애초부터 실천 지향의 학문으로 등장했고 오랫동안 평화운동과 긴밀히 연결됐다. 평화학과 평화운동의 연결을 단선적으로 이해할 수는 없다. 평화학도 다양한 갈래와 관점을 갖고 있고 평화운동 또한 여러 흐름이 존재한다. 평화관념과 전망이 애초부터 경합적이기도 하고 다원주의 사회에서 평화 지향은 단일하게 존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평화학과 평화운동은 때로 견제와 긴장도 불가피하다. 평화운동의 관점에서 평화학에 대한 비판과 요구를 듣고 싶다. 한국의 평화연구가 더욱 발전하려면 평화학이 단순히 평화운동을 보조하거나 추수하기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한국의 평화연구가 어떤 주제나 관점을 더 포괄해야 한다고 생

각하시는지 말해달라.

이정: 기존의 평화학이라고 할 때, 앞서 언급했듯이 거칠게 말하면 전쟁, 안보, 분단 등으로 이어지는 연쇄적인 사유 회로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 세 가지가 다 녹아있는 한국전쟁 하나만 보더라도 입체적인 이해를 위해서 우회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제주 4.3의 피바람을 피해 일본의 오사카 쪽으로 밀항하신 분들이 한국전쟁으로 무기를 실어 나르는 군수 열차를 멈추기 위해, 10분을 멈추면 동포 1,000명을 살릴 수 있다는 심정으로 철로에 몸을 묶었다면, 그들에게 평화는, 분단은, 참전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이었을까? 또는 패전 이후 평화헌법으로 전쟁과 군대를 포기한 전후 일본이 한국전쟁에 적십자사를 통해 간호사들에게 소집영장(아카가미)을 부활시켰다면, 일본 내 미군기지근로자들이 한국전쟁에 미군과 동반 파병되어 죽거나 다쳤다면, 일본의 민간선박과 상선의 선원들이나 공무원들이 한국전쟁에 동원되었다면, 이것은 전후 일본의 평화헌법을 비판할 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전쟁에 동원된 비인간 동물들(군견, 군마 등)과 전쟁으로 서식지를 잃은 수많은 비인간 존재들의 문제는 어떻게 ‘부수적인 피해’로만 수렴되지 않고 독립된 주제로 다뤄지며 가시화될 수 있을까? 군사기술이 동물들에게 어떻게 구사되고 있는가? 예를 들면, 드론으로 적들을 암살하는 것은 유해 동물로 규정되어버린 고라니나 멧돼지를 쏘아 죽이는 것과 같은 기술을 공유하고 있고, 한국에서도 유해 조수에 대한 드론 사격 특허가 나 있는 상태다. 병역거부운동의 성과로 대체복무제가 시행된다고 했을 때, 비종교적인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이들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어떤 말들이 만들어지고 어떤 고민이 오가고 있을까? 그 심사과정에서 한국의 군대와 남성성은 어떻게 새롭게 사유가 될 수 있나? 이런 문제들을 떠올려보면 나는 기존의 평화학이 지금-여기의 동시대적 고민을 끌어안고 가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평화연구가 국가 간 관계에만 함몰되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여러 존재들의 안전에 대한 담론을 만들어 나가야 할 때가 아닐까?

성상희: 한국 평화연구에서는 아시아와 한국의 전통사상에서 나타난 평화 개념과 이론에 관한 연구가 조금씩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 소태산 박중빈, 다석 유영모, 일속 장일순, 음악가 윤이상 등 현대사 인물들의 평화사상에

대한 연구 결과물이 출판되어 있다. 멀리 원효와 의상에서 시작하여 고려시대 이규보를 거쳐 근대의 홍대용에 이르기까지 한국 역사에서 주요한 학자들의 평화론도 소개되어 있다. 불교, 노장사상, 유학 등 한국의 정신세계를 형성해 온 종교와 사상들에 내재한 평화론, 그 사상 연구에 천착해 온 인물들의 연구와 실천을 더 깊이 연구한다면 한국 평화사상의 큰 줄기를 온전히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개별 주제와 관련해서 보면, 위안부 문제에 대한 역사학, 사회학, 심리학, 여성학 등 각 분과학문을 종합한 연구 결과물이 기대된다. 핵무기를 포함한 군축에 관해 포괄적인 연구도 필요하다. 군축 연구를 위해서는 무기 제조와 관련된 공학, 경영학, 무기 유통과 관련한 경제학, 사회학, 무기 통제조약의 초안 마련과 해석 관련하여 국제법학 등 다양한 분과학문이 결합해야 한다. 미얀마와 예멘 난민과의 접촉을 통해 우리 사회에도 현안으로 등장한 난민 문제는 평화학 연구의 주요한 영역이다. 난민촌과 연계를 해 오고 있는 국내 평화단체들과 손잡고 세계 각지의 난민 실태를 조사하고 종합하여 이론화하는 작업은 평화운동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평화운동과 평화학은 여성주의 및 사회적 소수자 운동과 어깨를 걸어야 한다. 차별받고 억압받는 자들의 인권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평화운동의 출발이 될 것이다. 여성주의와 평화학의 관계, 여성주의 평화학에 대한 한국 현실에 부합하는 연구도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평화연구에 있어서 국제법 영역의 접근도 매우 중요하다. 전쟁의 폭력이 끝나는 과정에서 체결되는 전투 중지(cease fire), 휴전협정(armistice), 평화조약(peace agreement) 등 조약들에 대한 해석과 실현 방법, 위반할 경우 그 책임소재 규명 등의 작업이 필요하다. 전쟁이 종결되고 수습되면 전쟁 개시 책임자와 전쟁 중의 전쟁범죄를 저지른 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이 쟁점과 과제로 대두된다.

이태호: 평화학 비판에 앞서, 어떤 수준에서건 평화학 그 자체의 부족을 언급하고 싶다. 세계적으로 지정학, 지경학, 국제관계학, 국제정치학 등의 이름으로 학문적 작업이 왕성히 이루어지지만 정작 평화학을 학문적으로 표방하는 사례가 많지 않다. 평화학은 더 많아져야 한다.

학문적인 차원에서 안보를 재정의하려는 노력이 없는 것은 아니고 사실 활발하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연구작업이 결국 다시 군사안보 논리를

포장하고 강화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포괄안보론’ 같은 담론은 다양한 해결과제들을 거론하고 나서, 결국 군대와 군사정책에 더 큰 역할을 맡겨야 한다는 식으로 결론을 내린다. 인도 지원도 수색 구조도 군대가, 에너지 안보도 군대가 해야 한다는 식의 논리가 그것이다. 이른바 ‘신흥안보’에 대한 수많은 논의도 결국에는 군대와 국가의 역할을 재구성하는 외피로 동원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재정적인 우선순위와 배분의 문제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세월호 참사, 동해산불, 이태원 참사 같은 대형재난이 빈발하면서 시민 안전과 재난 방지/대응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시민 안전 예산과 군사안보 예산의 불균형은 심각하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소방청 예산은 총 3,000억 미만이다. 우리 국방예산이 50조 이상인 것과 대조된다. 산불이 나거나 대형재난 상황에서 왜 군이 일찍부터 투입되지 않았느냐는 등의 얘기가 나오곤 하는데, 사실 군 장비나 인력은 파괴와 전투를 위해 고안되고 조직된 것으로 방재나 구조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단지 방재나 구조 인력과 장비가 없으므로 임시방편으로 투입되는 것일 뿐인데, 마치 재난 대응에는 군인력과 장비 투입이 당연하고 효과적인 것처럼 여겨지고 홍보되는 것은 오히려 위험하다. 그것은 현실과도 맞지 않고 대안도 아니다. 유관 학계의 상당 부분이 군사 분야 연구·개발 예산이나 프로젝트에 지배되는 상황도 문제다. 사실 학문 사상의 자유가 침해되는 구조인데 이에 대한 학계, 특히 이공계 연구자들이나 과학자들의 저항이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 공론장이나 연구 영역에서 평화적 수단이나 군축에 대해 말할 수 없는 분위기가 꼭 필요한 우선순위 논의를 제약하고 있는 예다.

같은 이유로 군사안보전문가가 아닌 평화전문가 또는 시민사회와 긴밀하게 연결된 평화연구자가 극히 적다. 국가 기구나 학계에서 시민사회에서 오랫동안 안보를 재정하고 평화를 만들기 위해 씨름해온 활동가들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데 무척 인색하다. 요컨대, 안보전문가가 아닌 평화전문가가 부족하고 다양하지 않으며, 지역사회의 현장과 연결된 평화전문가나 연구자는 더욱 희귀하다고 생각한다. 바로 그 점에서 강원대학교 통일강원연구원과 대학원 평화학과의 향후 시도와 발전에 기대가 크다.

송영훈: 세 분께 개별 질문을 드린다.

▷ **이태호 선생님께 드리는 질문:** 선생님은 한국 평화운동의 주역으로서 수많은 실천 현장을 경험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의 활동과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의 현재 상황을 중심으로 한국 평화운동의 과제와 전망을 말해달라. 한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반대하는 지구적 연대가 그 강도나 결속 범위에 있어서 과거의 평화운동과 비교했을 때 약하다. 선생님께서는 그 현상을 어떻게 보는가? 국내외 평화운동의 발전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말해달라.

이태호: 한반도종전평화캠페인(Korea Peace Appeal Campaign)은 70년간 지속되어온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끝내고, 한반도를 둘러싼 갈등, 예를 들면 북한의 핵무기 개발 같은 쟁점들을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해나가자는 국제 시민행동이다. 주된 행동 전략은 한국전쟁 발발 70년인 2020년부터 정전협정 체결 70년이 되는 2023년까지 한반도 평화선언(Korea Peace Appeal)에 대한 전 세계시민들의 서명과 각국 시민사회, 종교계, 정부와 의회의 지지 선언,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시민들의 행동을 모으고 연결하여 하나의 큰 목소리로 만드는 것이다. 한반도 평화선언은 △한국전쟁 종식과 평화협정 체결, △핵무기도 핵 위협도 없는 한반도와 세계의 실현, △제재와 압박 대신 대화와 협력을 통한 평화적인 갈등 해결, △군비 경쟁의 악순환에서 벗어나 시민 안전과 환경을 위한 투자하는 것 등 4가지 제안을 담고 있다. 한국에서는 350여 개 시민사회종교단체, 세계 곳곳에서는 약 70여 개의 파트너 단체/네트워크가 참여하고 있다. 정전협정 체결 70년이 되는 2023년에는 그동안 취합한 서명, 지지 선언과 서한, 결의안 등을 남, 북, 미, 중을 포함한 한국전쟁 관련국 정부와 유엔(UN)에 전달해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 캠페인을 자평하자면, 우선, 그동안 이 문제에 발언해온 국내외의 시민사회 주체들이 대체로 이 네트워크에 참여해 한반도 평화에 관한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모아내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반도 평화선언의 제안 내용과 전략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다양한 입장과 주장을 반영하고 합의하기 위해 제법 큰 노력을 기울였다. 이 캠페인의 또 다른 특징은 한반도 문제를 국제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문제로 제기했다는 점이다.

제안 내용 역시 단순히 한반도 평화를 호소할 뿐만 아니라 핵무기 없는 세상, 군축을 통한 시민 안전과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투자 등을 함께 제안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편적 의미를 담고 있다. 한반도의 특수성만을 강조해온 캠페인과는 조금 다른 접근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여전히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관련된 문제를 시민의 일상의 삶의 문제로 제기 해내는 데 많은 한계를 느끼고 있다. 한반도 문제를 보다 보편적인 평화, 군축, 핵 폐기, 인간안보, 기후위기 대응 등의 이슈 등과 연결하는 것도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어려웠다.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국내외의 비관적 태도도 이 운동의 확산을 어렵게 하고 있다. 그 결과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캠페인의 성과는 더디게 축적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미-중의 갈등 심화 같은 요인으로 인해 미국 등 주요국에서 한반도 문제가 공론장이나 정책 결정 과정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주변화되고 있는 것도 장애요인이다. 국내에서 윤석열 정권의 등장 이후 대북정책 역주행도 상황을 어렵게 만들었다. 전 세계적으로 군사주의가 득세하는 상황이기도 하다. ‘이 와중에 시민 서명으로 바꿀 수 있는 게 과연 있는가?’라고 주변에서 물어올 땐 곤혹스러운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모두가 ‘힘을 통한 문제 해결’에 몰두하면서 한반도 상황이 악화 일로를 겪게 되면서 역설적으로 이 운동에 관한 관심과 참여가 도리어 점차 늘어가는 추세다. 그렇기에 앞으로 이 캠페인에 가속이 붙을 것으로 본다.

국내에서 평화-통일운동 부문 외의 시민 사회운동, 노동계, 종교계, 지역 사회 등에서 풀뿌리로부터의 실질적인 동참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국제적으로 명실상부한 국제평화 캠페인이 되도록 주체 구성을 다양화하고 각 나라와 지역의 실천을 자력하고 연결할 것인가, 이 문제의 당사자 중 하나인 북한 민간의 참여는 어떻게 이루어낼 것인가 등이 당면한 과제이면서 동시에 실천 방향이라 할 수 있다. 그 과제와 방향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한계와 문제들은 비단 종전 평화 캠페인만이 아니라 국내의 다른 시민 사회운동도 직면하는 문제들이다. 가장 크게 한계를 절감하는 것은 부문과 부문, 단체와 단체, 도시와 도시, 개인 행위자 간의 국제 시민 네트워크가 취약한 것 그리고 그 취약한 네트워크들 사이에서도 소통과 연결이 미흡한 것 등이다. 그런데 역시 남는 핵심 질문은 우리가 새롭게 만들고 형성하고자 하는 미래와 질서 속에서 북한의 위치는 무엇인가, 북한을 어떻게 연결해낼 것

인가, 언제까지 북한과 한반도 정전체제라는 복잡한 문제를 외면하거나 공백으로 둘 것인가 하는 질문들이다. 북한에 대한 무관심과 일방주의적 편견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까 하는 것이 한국 사회와 세계, 그리고 특히 평화운동과 국내 및 국제 정치에 던져진 질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한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세계의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고 세계적 이슈가 되고 있다. 이번 침공은 무력이 아닌 외교를 통한 문제 해결을 추구해온 국제사회의 노력을 망가뜨리는 행위라고 생각한다. 러시아는 전쟁이라는 극단적 수단을 택했지만, 금세기 들어 일어난 모든 전쟁과 마찬가지로, 그 결과는 러시아의 의도한 대로 관철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미 전쟁은 장기화하고 있다. 전쟁으로 인한 대가는 일차적으로 침략당한 우크라이나의 시민들, 그리고 침공을 감행한 러시아의 시민들이 참혹하게 치르고 있다. 이 전쟁이 가져온 수많은 군사적, 경제적, 정치적 대가를 감당해야 할 유럽과 세계의 시민들도 크나큰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표현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한반도의 과거가 우크라이나의 미래, 즉 수많은 인명을 살상하는 교전이 장기적으로 지속되다가 기약 없는 잠정적 휴전이 이어지는 상황이 되는 것이 아닌지 걱정된다.

게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전 세계적 차원에서 군사주의가 득세하고 있는 것도 우려할 일이다. 오랜 불신과 무장갈등을 멈추고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은 전쟁 이전에도 취약했고 갈수록 약화하고 있다. 이번 전쟁을 계기로 군사동맹과 군비에 의존하는 경향이 유럽은 물론 세계 곳곳에서 강화되고 있다. 자국중심주의와 더불어 팬데믹, 기후위기 등을 극복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은 취약해지고 있다. 한편, 우크라이나에서 현실로 확인되고 있는 군사동맹/협력에 따른 ‘연루와 방기의 딜레마’는 동아시아에서 같은 위험에 노출된 대만과 한반도 주민들에게 많은 고민거리를 안겨준다. 윤석열 정부식의 군사동맹 올인 정책에 시민들이 과거보다 더 큰 의구심을 보내고 있다. 관계 개선을 통한 평화유지는 비현실적으로 보이지만 가장 현실적인 길일 수 있음을 시사하는 현상이라고 본다.

▷ **성상희 선생님께 드리는 질문:** 강원대 통일강원연구원과 『평화들 PEACES』는 로컬 차원의 평화 주체성에 주목한다. 로컬(local)은 단순히 중심을 전제한 의미의 주변이나 지방이 아니라 실제 평화 형성의 정치 사회적 공간, 즉 현장(또는 현지)

이자 동시에 평화 형성의 수행 주체다. 선생님도 대구에서 ‘생명평화아시아’라는 로컬 평화운동의 거점을 만들었다. 로컬 단위에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활동의 의미와 의의, 문제와 장벽을 말해달라. 특히 생태 관점의 평화운동을 전개하는 이유도 궁금하다.

성상희: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러시아-우크라이나의 전쟁에 대해 보충하겠다. 미국이 주도한 나토의 동진정책과 우크라이나의 나토가입 흐름이 러시아라는 높은 호랑이를 압박해 전쟁의 요인을 제공했다는 생각이 평화운동 진영에 강하다. 나토를 거느리면서 세계 패권을 유지하는 미국 일극체제에 대한 균열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러시아의 행태에 대한 심정적으로 지지를 갖는 시민들도 조금은 있다고 본다. 그것은 미국이 주도한 베트남전쟁이나 이라크전쟁에 대한 반대운동이나 정서와 큰 차이를 보인다.

결국 우크라이나 전쟁의 경우 베트남전 등의 때와는 달리 반전운동의 과녁이 단일하지 않고 선명하지도 않다. 침략국 러시아를 규탄하지만 5대 강국의 거부권이라는 불합리한 제도를 형성, 유지, 강화하는 궁극의 주체가 미국이라는 점, 그래서 미국은 그것을 부술 의사가 없고 따라서 국제연합 개혁을 통한 전쟁 억제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평화운동 참여와 지지 시민들이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러시아를 비판하는 것만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평화운동의 과제라 생각하지 않는 듯이 보인다.

우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침략국이 되었을 때 유엔이 전혀 기능을 하지 못하는 현실을 마주했다. 향후 5대 강국 비토권에 대한 일정한 견제 장치 마련, 총회의 권한 강화, 국경 내부 혹은 국경 밖은 다양한 폭력에 대한 유엔의 개입력 증대와 권위 강화 등 유엔 개혁운동이 평화운동의 주요한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생명평화아시아(약칭 ‘생평아’)는 생명평화운동의 사상이론정책 정립과 대중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물질 기반 구축을 목표로 녹색정치 지향의 소규모 정치재단을 지향한다. 그것은 대구/경북에서 출발했기에 주요 활동을 지역에서 하고는 있으나 의제 선택이나 조직 활동의 범위를 지역에 한정하지는 않는다. 실제로 서울·경기권 회원 모임이 약간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생평아는 녹색정치의 정치재단이라는 지향을 두고 출발했지만,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다. 생평아의 활동은 토론회와 강좌 개설을 통해 스스로 공

부하고 그 공부를 나누는 초보적 정도에 머물고 있다. 활동 형식은 토론회, 강연, 현장 방문(사드 반대운동 등), 조사연구 발표회, 단행본 출판 등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생태 부문 사업이 좀 더 활발하고 평화 부문 사업은 교육 행사 정도에 머물고 있다. 평화영역에서는 그동안 한반도 평화에 대해 여러 번 강좌와 토론회를 열었다. 올해 상반기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강연 시리즈를 진행했고, 올해와 내년에 걸쳐 평화와 인권, 평화운동을 주제로 한 강연이 진행될 예정이다.

생명평화운동의 물적 기반을 구축한다는 목표에 기초해 대구에서 제법 넓은 공간을 마련해 ‘생명평화나눔의 집’을 마련했다. 그 운동과 관련한 여러 단체가 입주해 함께 생활하며 활동하고 있다. 생명평화나눔의 집은 생평아와 함께 생태주의 그룹들, 즉 녹색당, 환경연합, 녹색연 등과 평화 운동단체(평화통일시민연대)와 부문 운동 조직(교육 누리)들이 함께 하고 있다.

생평아는 아직 초보적 수준에서 이론 정립과 교육 사업을 하는 상태여서 문제와 장벽을 논할 시점은 아니다. 생평아의 평화 부문 사업은 내부에서 상설위원회로 자리를 잡아 가고 있는 ‘평화위원회’가 주로 수행한다. 생평아가 지역 평화운동에 실천적 연대를 하는 흐름은 아직 미약하고, 토론회와 교육 활동 통하여 문제의식을 형성해 나가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본다. 생태주의 운동, 탈핵과 에너지전환 운동이 반전운동, 평화운동과 연결고리를 확보해야 하고 이를 위한 사회운동 그룹의 눈뜨기가 필요하며, 생평아가 그 역할을 일정 정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생태주의 관점의 평화운동을 하는 이유는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다. 현대 평화운동의 최고 상대는 국가 단위 혹은 세계적 수준의 탐욕을 의미하는 자본주의다. 그러므로 뿌리에서부터 자본주의에 맞서는 지향은 생태주의라 할 수 있다. 탐욕과 어리석음에 물든 최고의 악행이 전쟁이며, 전쟁을 부르고 전쟁을 일으키는 세력에게 지구의 평화를 빼앗기지 않으려면 개인, 집단, 국가가 탐진치(貪瞋癡)에 영혼을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결국 생명의 가치에 그 뿌리를 둘 때 평화운동이 튼튼해질 것이며, 생태주의와 여성주의가 평화운동의 굵은 뿌리가 되기를 바란다.

▷ **아정 선생님께 드리는 질문:** 선생님은 평화운동가이면서 동시에 독립연구자로 주목받고 있다. 기왕의 국내 ‘위안부’ 운동, 즉 정의기억연대 중심의 운동에 대해

서도 비판적 견해가 있다면 말해달라. 페미니즘 관점의 평화운동과 동아시아 폭력사의 비판과 과거사 정리 활동을 경험으로 기왕의 한국 평화운동에 대한 비판적 평가와 건설적 제언을 요청한다. ‘여성’ 평화운동의 고유성에 대해서도 보충해달라.

아정: 페미니즘 혹은 퀴어 정치의 관점에서 평화를 사유하고 실천을 모색한다는 것은 기존의 평화운동에 대한 이해와 비판 속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그 비판은 기존 운동의 역사와 노고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님을 말해 두고 싶다. 기존 운동을 비판하는 것이 운동사 전체에 대한 부정으로 오인되는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비판에 열려 있지 않은 매우 폐쇄적이고 방어적인 태도에 매우 아쉽다.

우선, 평화운동 앞에 ‘여성’ 혹은 ‘페미니즘’이 수식어로 붙는 것에 대해 신중함을 말하고 싶다. 이 경우 ‘여성’은 생물학적인 여성이라기보다는 ‘여성이라는 자리’를 말하는 것이기도 한 것 같다. 여성의 자리에서 말할 수 있는 평화, 여성의 자리에서 보이는 문제들을 풀어나가려는 실천으로서의 평화에 주목하고 싶다. 예를 들면, 베트남전쟁이 한창일 때 미국에서 참전군인들을 중심으로 한 반전 평화운동의 열기 그리고 제2페미니즘의 물결 속에서도 전시 성폭력에 대한 고민과 성찰은 독립된 주제로 다루이지 못했다. 그도 그럴 것이 미국에서 성폭력은 성행위가 아니라는 것이 공론의 자리에서 말해지고, 각지에 강간 위기센터가 문을 연 것도 1970년대 초중반의 일이다. 결국 반전 평화운동과 페미니즘운동이 갈라서면서 두 운동 모두 당시에는 베트남전쟁에서 벌어진 전시 성폭력을 제대로 공론화하는 것에 실패했다.

그런데 흥미로운 지점이 있다. 같은 시기 방글라데시 독립전쟁 때 강간 피해를 본 수십만 명의 여성들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최초로 공중파 보도가 있었다. ‘국제연대’라는 이름으로 말이다. 원조나 지원으로 말해지는 1세계의 국제연대를 지금 한국에서 답습하고 있지 않은가? 준국가기구인 코이카 등의 사업을 통해서다. 그런 활동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평화운동에서 ‘국제’를 말할 때, 운동의 벡터가 권력의 흐름과 그 맥을 같이하고 있다는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국제연대는 우리 사회 안에서도 가능하고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한국에 이주민 수가 200만 명을 넘은 지 오래다. 이주민은 전체 인구의 5%에 육박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이다. 이주노동자가 아니라 이주해온 이웃

이다. 난민 신청자 중 상당수가 내전이나 전시 성폭력 등 젠더기반 폭력을 피해온 분들이다.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박해받은 분들도 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둘러싸고 램지어(John Mark Ramseyer) 같은 수준 이하 연구자의 말 한마디에 온 학계가 들쭉이는 걸 보면서 매우 안타까웠다. 반론이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그렇게까지 온 힘을 쏟아 반응을 해줘야 하느냐는 생각이 들었다. 한국의 대법원에서는 전시 성폭력 피해자들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심지어 떠나온 나라로 추방까지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왜 ‘위안부’ 운동의 동력이 되었던 그 대단한 힘들이 꿈쩍을 하지 않을까? 운동과 운동이 만나지 못하고 각자의 운동에 함몰되어 서로서로 고립시키는 상황이 이어져 왔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지점이다. 서로의 운동과 문제의식에 더욱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연대를 모색하면 좋겠다. 국가권력에 간청하는 국민청원의 방식이나 연서명을 뛰어넘는 관계를 맺고 싶다.

나는 정의연 중심의 ‘위안부’ 운동에 국한해서 말하기보다는 ‘위안부’ 문제를 다뤄온 방식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싶다. 나의 문제제기는 비단 정의연의 문제, 그들의 실패에 국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선 나는 ‘위안부’ 문제의 ‘외교 문제화’라는 지점을 문제 삼고 싶다. ‘위안부’ 문제를 국가 간 문제로만 다룰 때,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증언들만 확보하려고 하게 된다. 말하지 못한/않은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한국 사회가 청자로서 얼마나 들을 준비가 되었을까 하는 질문을 하고 싶다.

나는 『일본인 ‘위안부’: 애국심과 인신매매』(전쟁과 여성에 대한 폭력 리서치 액션센터 니시노 루미코·오노자와 아카네 엮음, 번역공동체 잇다 옮김, 논형, 2021년)라는 책을 동료들과 함께 번역했다. 2000년 도쿄국제여성전범법정에서 직접 목격했던 어떤 장면을 20년이 지난 시점에 이 책의 번역작업을 통해 다시 만나게 되었다. 2000년 당시 일본인 ‘위안부’의 존재가 이미 알려져 있었지만, 그리고 그들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기소장에도 나와 있지만, 일본인 ‘위안부’ 중 누구도 증언대에 오르지 못했다/않았다. 공청회 때 전문가 증언대에 오른 연구자 후지메 유키는 일본인 ‘위안부’의 피해자가 두 명이라고 말했다. 귀를 의심했다. 두 명? 자기가 일본인 ‘위안부’였다고 자처한 사람들이 두 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법정에서는 그렇게 말했던 것이다. 후지메 유키는 이들이 매춘부였기에 피해자다 또는 아니다 하는 식으로 그들의 전력(前歷)을 문제 삼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고, 그 장면이 오랫동안 내

기억에 남아있었다.

그래서 일본인 ‘위안부’로 관심이 옮겨갔는데, 그곳에는 또 ‘공창제’라는 문제가 버티고 있었다. 위안소를 세운다는 발상은 공창제와 연속/불연속성을 갖는 것이고, 이런 관점에서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제도는 근대국가가 여성들의 성적 권리와 재생산 정의를 장악하는 과정이기도 한데, 그렇다면 지금의 운동들과도 접점이 있는 것이다. ‘나눔의집’ 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국 사회의 높은 관심에 반해 이곳에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증언을 강요받으며 살아온 당사자들이 있다/있었다는 것은 잊혀가고 있다. 내부 고발자들 전원이 일을 그만두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조계종의 권력 앞에서 침묵하는 기존의 운동단체들, 탈시설의 관점에서 그들의 문제를 바라보기 등 여러 논의의 지점들이 산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송영훈: 평화운동에 관심을 갖거나 지속하게 된 계기나 요인은 무엇인가? 어떤 이유로 평화운동을 실천(연구)하고 있는가? 그동안의 평화 관련 활동과 관찰에서 가장 인상 깊은 일이 무엇이었는지 말해달라. 평화 텍스트나 행사, 장소나 사건, 인물이나 일화 중 평화운동을 고무시켰던 경험을 알려달라. 평화에 관심을 가진 독자들, 특히 평화연구자들이나 활동가들이 도덕적 용기와 긍정적 힘을 갖도록 해달라.

이정: 병역거부를 하고 감옥에 간 친구를 도우면서 병역거부자 출신 변호사 친구가 생겼다. 그와 함께 2018년에 ‘베트남전쟁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평화법정’을 꾸리게 되었다. 그때 나는 조사팀 간사로 활동하면서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를 인터뷰했다. 그 과정에서 참전군인 한 분과 수십 번을 만나며 깊이 관계 맺게 되었던 것이 ‘가해자성’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본인 ‘위안부’: 애국심과 인신매매』(논형, 2021년)와 『유곽의 총파업 -해방과 노동의 경계에서』(논형, 근간)이라는 책의 공동 번역을 통해서 피해 서사에 갇히지 않는 전시 성폭력의 문제와 제도로서의 공창의 문제, 또 일본에서 노동운동이 한창이던 시기 유곽의 총파업까지 휘말려 들어갔고, 백 년 전 일본의 창기들과 지금-여기 한국의 성노동자 권리 운동을 잇는 공론장을 당사자들과 만들게 되었다. 공부를 하다

보니 휘말려 들어간 것이지, 처음부터 어떤 목적지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베트남시민법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전시에 ‘부수적인 피해’로 말해지는 존재들에 대해 생겨난 문제의식으로 가해자성이 극대화되는 관계, 즉 국민/시민/인간사회를 지탱하는 버팀목으로 쓰고 버려지는 이주노동/구금의 문제와 비인간 동물에 대한 거대축산업의 수탈, 그리고 반환된 미군기지라는 장소성에도 주목하게 되었다. 결국 내가 하나의 우물을 계속 파지 못하고 여러 활동을 동시다발적으로 하게 된 이유는 이러한 문제들에 작동하는 권력이 연동되어 있기 때문 아닐까 생각한다. 그래서 사실 내겐 전문 영역이라 할 게 없다. ^^

마지막으로 동두천 미군기지 아카이빙 작업을 하다가 만난 뜻밖의 존재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마무리하고 싶다. 나는 미군이 떠난 자리에 난민신청자들, 특히 내전을 피해 아프리카를 떠난 새로운 이웃들이 들어와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경기 북부에 자리한 동두천은 화력발전소, 도축장, 세탁공장, 가구공장, 염색공장 등이 배치된 노동의 힘지다. 이곳에서 부모를 따라 입국했거나 한국에서 태어난 이주 배경 어린이들을 만나게 되었다. 로컬 내지 지역 연구라는 측면에서 이 얘기를 해보자면, 그들이 떠난 곳에 대한 이해와 그들이 자리-옮김을 통해 살아가게 된 곳에 대한 동시적인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병역거부운동이 하급심 판결을 축적해 온 것처럼, 하나하나의 사례에 충실하게 머무르는 시간의 소중함을 절감한다. 그때 곁에서 함께 하는 동료들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연대’라는 것의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것 아닐까. 나는 지금 그 연대의 과정에 있는 것 같다.

성상화: 아프간 전쟁과 이라크 전쟁이 발발하고 미국이 두 나라를 점령한 상태에서 얼마 지나지 않은 2005년 40대 초반의 나이에 독일로 가는 안식년의 기회를 얻었다. 파병 반대운동 집회에도 참여하고 이라크 전쟁을 멀리서 보면서 평화운동 그리고 전쟁과 평화에 관한 국제법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2년간 머물면서 책을 읽고 현장을 찾아다녔다. 2006년부터 보쿰대학 ‘평화보장법과 국제인도법 연구소(IFHV)’ 객원연구원으로 1년간 머물렀다. 그때 평화운동과 전쟁법에 관한 다양한 책과 논문을 통해 분쟁과 그 해결 방안에 대한 눈을 조금씩 뜨게 되었다. 팔레스타인 관련 자료를 많이 읽었다. 2007년에는 레바논과 요르단을 방문하여 2006년 이스라엘 침공으로 폐허가 된

레바논 남부지역 현장과 난민촌들을 둘러보고, 요르단과 팔레스타인의 경계를 따라 여행하면서 역시 난민촌의 모습을 살펴보았다. 레바논 남부에서 이스라엘군 공습으로 파괴된 현장에서 50명 이상 민간이 살해된 사건의 희생자들 묘역에 갔던 것, 1982년 기독교 민병대 팔랑헤의 대학살극으로 수백명 혹은 수천 명이 살해당하였다고 하는 샤브라사틸라 난민촌에서 숙박하면서 며칠을 보낸 것도 잊지 못할 경험이었다.

당시 공부를 통해 이스라엘 핵 개발을 알린 모르데차이 바누누(Mordechai Vanunu)의 삶을 알게 되었고, 핵확산금지조약 공부를 하면서 미국에 의한 나토 국가들의 핵 공유(nuclear sharing) 쟁점을 알게 되었다. 새롭게 눈을 뜨는 느낌이었다. 바누누는 핵공학자로 이스라엘 핵 개발 작업에 관여하다가 양심선언을 하면서 핵 개발 상황을 폭로하고, 이후 해외에서 모사드에게 납치되어 18년간 수감생활 후 석방되어 감시를 받는 세계 반핵운동의 상징적 인물이다. 2006년에 영화 ‘호텔 르완다’도 인상 깊게 보았다.

귀국한 뒤 2011년 나는 녹색당에 가입하고 생태주의에 관심을 가졌고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에 나가면서 평화운동에 대한 식견을 넓힐 수 있게 되었다. 히로시마, 토오쿄오, 오사카를 방문하고 오키나와 변호사들과의 만남을 통해 일본의 평화운동을 보게 되는 기회를 얻었다. 주로 민주주의 회복과 인권을 주제로 만났지만 네 차례 방문하고 소수민족 지역도 찾았던 미얀마 인권 기행도 내게 평화운동에 대한 많은 영감을 주었다. 서로 인사를 나누었던 인권 운동가가 암살당하였다는 슬픈 소식도 들었다. 최근에는 생평아가 한국 내 미얀마 망명자 그룹과 이주민들을 초청하여 군부 쿠데타 이후 민중의 저항 이야기를 듣는 기회를 만들었다. 민변 아시아인권팀의 후반부 사업이었던 베트남 민간인 학살지 방문 여행은 이후 베트남 민간인학살 민간법정 사업과 한국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법정투쟁을 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제주도 4.3공원을 돌면서 숨진 이들의 기록을 볼 수 있었고, 아직은 군사기지가 완공되지 않은 시점에 강정마을 집회에서 기지 건설 현장까지 접근해 반전 목소리를 외치는 현장에 같이 있었던 것 또한 오랫동안 울림이 있는 일이었다.

이태호: 나 자신을 평화운동 활동가라고 인식하게 한 몇 가지 계기가 있다. 우선, 학생운동에 참여하면서 통일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 첫 번째 계

기였다. 1980년대 중후반에 학생운동에 가담하면서 ‘북한’이라는 금기를 다루는데 두려움과 더불어 강한 호기심을 가지게 되었다. 함께 학생운동을 하던 선배가 총학생회장에 출마하면서 북한 대학생과의 교류를 공약으로 내거는 것을 지켜보면서 ‘이런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이었나’ 생각하게 되었고 곧 ‘학생통일운동’에 몰입하게 되었다. 북한과의 교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상상했던 북한은 이상적인 사회주의 국가까지는 아니어도, 여러 제약 속에서도 그럭저럭 사람이 살만한 곳이었는데, 그런 생각은 곧 깨졌다. 1980년대 말에서 1990년대 초 사이에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하고 독일이 통일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통일에 관한 생각도 크게 변했다. 내가 통일운동보다는 평화군축운동 혹은 평화인권운동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된 것도 그즈음이었다. 1990년대 후반 북한에서 대기근이 일어났을 때, 나의 몇몇 동료들은 조-중 국경에서 북한이탈주민을 돕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었고, 나도 휴가를 내서 잠시 그들을 도왔다. 중랑천보다 더 폭이 좁은 두만강 상류의 강변에서 처참하게 황폐해진 북녘땅과 주민들을 바라보면서 슬프기보다는 너무나 괴이한 느낌이 들었다.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있는 우리는 왜 이곳에 와서 북한 주민들을 돕고 있는가? 한 세기 전 역사의 큰 회오리 속에서 이고 지고 이 강을 건넌던 피난의 행렬은 왜 지금 다시 반복되는가? ‘인민공화국’에서 ‘인민’들이 겪는 비인간적 상황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었다. 하지만 정작 가슴 아팠던 것은 그것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는 비인간적 분단 현실이었다. 그 후 거기서 내가 경험한 기괴한 시공간의 문제와 마주하는 것이 큰 숙제가 되었다.

한편, 참여연대에 들어와 시민운동을 시작하면서 화두처럼 몰두했던 과제는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였다. 인민공화국에서는 왜 인민이 주인이 되지 못했는가는 질문 그리고 자유주의에서 왜 자유는 소수의 전유물인가와 같은 오래된 질문 등에 답하려면 권력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참여민주주의를 표방한 참여연대에 입사해서 그 실험을 해보려고 했다. 그렇게 시작한 반부패운동과 정치개혁 운동은 곧 큰 호응을 얻었다.

하지만 중국에는 그 운동이 진영논리나 안보권력에 가로막히는 것을 경험해야 했다. 반부패 운동, 특히 내부 제보자 지원활동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도 군이나 정보기구에서의 권력남용이나 사익 추구에 관한 제보, 군수산업과 관련된 비리의 제보 등에 관한 것이었다. 그 과정에서 권력의 통제를

위해서는 안보권력을 감시하고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 말은 그것을 내가 책에서만이 아니라 경험으로 배웠다는 뜻이다. 나아가 안보 그 자체를 재정의하고 군사안보 대신 시민 안전을 중시하는 사회구조를 만드는 일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여기게 되었다. 그런 문제의식을 함께 느낀 참여연대 주변의 전문가들과 활동가들이 만든 것이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다. 내가 평화군축센터 활동가로 일하면서 동시에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이나 이태원 참사 추모 같은 시민 안전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연대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런데 안보권력을 감시하는 것은 쉬운 일도 아니고 안전한 일은 더더욱 아니었다. 다년간 군사기밀, 무기체계, 군사기지와 군사행동 등에 관한 이슈들을 상대하다 보면 날 것 그대로의 안보권력과 직면하는 일이 종종 있다. 천안함 사건에 대한 정부의 조사 결과에 공개적으로 이의를 제기한 후 집으로 가는 길에서 느꼈던, 거대한 권력이 내 뒤에서 나를 훑쳐보고 공격할 틈을 노리고 있다는 느낌 같은 것이 그것이다.

알카에다의 9.11 공격과 미국의 아프간-이라크 침공을 생중계로 지켜보았던 경험도 평화운동에 대한 동기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9.11 공격보다도 미국의 아프간-이라크 침공이 내게는 더 큰 도전이었다. 이론적으로 미국 민주주의의 한계를 학습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현실에서 미국이 어떻게 야만적인 전쟁, 무장갈등의 악순환, 인간성의 파괴로 자국민과 세계를 이끄는지, 이른바 ‘서방’의 판단과 결정이 얼마나 편견과 무지에 사로잡힌 채 이루어지는지, 그 후의 결과에 대해서는 얼마나 무책임한지도 그 후 수년간 똑똑히 지켜보았다.

한편, 반전평화운동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국내는 물론 미국과 세계 곳곳에서 정말로 존경할만하고 헌신적인 평화인권활동가들을 많이 알게 되었고, 그들이 해온 실천들에 대해서도 경험하고 공부하게 되었다. 제주 해군기지 반대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만났던 주민들, 다양한 성향과 배경의 활동가들, 종교인들, 오키나와-대만-괌-하와이의 주민과 활동가들에게서도 강한 유대감을 느꼈다. ‘강정싸움’이 특별한 이유는 이 운동이 용산참사진상규명, 밀양송전탑반대, 쌍용자동차정리해고자복지,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같은 당대의 문제들과 씨름하며 새로운 우선순위를 제기했던 사회적 약자들의 오키퍼 운동과 스스로를 동일시하고 연대했다는 점이다. 그 연대에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이 자랑스롭다.

그들과 연대하고 교류한 경험이 다른 세상, 혹은 다른 인간성에 대한 기대와 함께 일할 동기를 북돋워 주었다. 그 후 이라크와 아프간에서 세계 최강의 군사력이 늪에 빠지고 그 패권이 무너지는 광경도 보았고, 이후 철웅성 같던 월스트리트가 공황에 빠지는 것도 지켜보았다. 그것은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다른 세상은 가능하다’라고 더욱 확신하는 계기가 되었다.

송영훈은 강원대학교 통일강원연구원장과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에서 아프리카 내전과 강제이주 문제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 외에도 남북관계와 개발협력 등을 연구해 오고 있다. 주요 논문으로는 “Living on the Border? Human Rights and Selection Process in the Forced Migra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수의 정치: 난민인정률의 국제비교” 등이 있다.

성상희는 법무법인 우리하나로(Lawoffice Woori-Hanalaw)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1970년대 긴급조치와 반공법 위반 수감자들 구금 관련 국가폭력에 대한 재판을 다수 진행하였다. 2015년부터 생태주의 운동과 평화운동 과제에 집중하는 사단법인 생명평화아시아라는 단체를 준비하여 2018년 창립 이후 이사 소임을 맡고 있다.

이태호는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소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평화포럼 운영위원장, 4월16일 의약속국민연대(4.16연대) 상임집행위원장 직을 맡고 있다. 공저: 『변혁적 중도론』(창비, 2016), 『촛불 이후 사회운동의 과제 및 전망』(선인, 2019), 『통일을 어떻게 생각하세요?』(열린책들, 2020).

아정은 독립연구활동가로서 번역공동체 잇다 공동대표(2017~), 평화페미니즘연구소 상임연구위원(2020~), 화성외국인보호소방문시민모임마중 활동가(2020~), 외국인보호소폐지를 위한 물결(International Waters 31) 활동가(2021~), 동물해방공동체직접행동DxE 활동가(2022~)로 활동하고 있다. 대표논문: 「민간인학살 수형 병사들의 PTSD와 가해자들의 말하기-중일전쟁시기 일본군’병상일지’와 베트남전쟁시기 한국군의 증언을 중심으로」, 『문화와 정치』 제7권 2호 (한양대 평화연구소, 2020). 공저: 『動物のまなざしのもとで』(勁草書房, 2022), 『난민, 난민화되는 삶』(갈무리, 2020). 공역: 전쟁과여성에대한폭력리서치액션센터, 『일본인 ‘위안부’-애국심과 인신매매』(논형, 2021), 니시무라 히데키, 『“일본”에서 싸운 한국전쟁의 날들-재일조선인과 스이타사건』(논형, 2020).